

대전광역시 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안

의안 번호	183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07. 7. 9.

발 의 자 : 김인식의원외 13인

1. 제정이유

대전시는 「장애인·노인·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」이 규정하는 편의시설 및 설비를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의 완공 전에 적절한 사전검사를 실시하여 편의시설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하도록 편의증진을 도모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편의시설에 대한 설계자문에 대한 내용을 규정함(안 제3조).
- 나. 편의시설 설치검사, 사전검사 대상, 검사시기 및 방법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(안 제4조 내지 제6조).
- 다. 사전검사요원의 구성, 수당, 직무, 의무 및 제척에 대한 내용을 규정함(안 제7조 내지 제10조).
- 라. 관계공무원·건축물 시설주의 의무에 대한 내용을 규정함(안 제11조 내지 제12조).
- 마. 사전검사 보고서의 작성과 보고, 결과의 반영에 대한 내용을 규정함(안 제13조 내지 제14조).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장애인·노인·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」
- 나. 합 의 :

대전광역시 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장애인·노인·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」이 규정하는 편의시설 및 설비를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의 완공 전에 적절한 검사를 실시하여 편의시설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을 도모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“사전검사”라 함은 「장애인·노인·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이 규정하는 편의시설 및 설비(이하 “편의시설”이라 한다)의 설치가 완료되기 이전에 시설주관기관의 장이 인정한 기관 및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검사요원이 직접 해당 설계도면 및 시설물을 검사하여 적절하지 아니한 사항의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.

제3조(편의시설 설계도면 사전검사) ①시설주관기관의 장은 편의시설 관련 기관 가운데 2곳 이상의 기관을 선정하여 편의시설 자문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.

②시설주관기관의 장은 대상시설의 신축, 증축, 개축, 리모델링, 리노베이션 등의 허가에 있어 허가 이전에 반드시 제1항 규정에 의한 기관에서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설계도면을 사전검사하여야 한다.

제4조(편의시설 설치검사) 시설주관기관의 장은 편의시설설치 및 설치된 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를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검사요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다.

제5조(사전검사 대상) ①법 제7조에서 규정하는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로 한다. 다만, 국가와 정부투자기관,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시설은 사전검사를 받아야하며, 민간시설에 대한 검사대상은 별도의 규칙으로 그 범위를 정한다.

②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하여 기준을 완화하고자 할 경우 사전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.

제6조(검사시기 및 방법) ①이 조례에 의한 사전검사는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이 완공되기 전에 실시한다.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검사를 할 때에는 사전검사요원(이하 “검사요원” 이라 한다) 3인 이상으로 한다.

제7조(사전검사요원의 구성) ①이 조례에 의한 사전검사를 위하여 시설주관기관에 검사요원을 둔다.

②검사요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시설주관기관의 장이 15인 이내로 구성한다.

1. 장애인 편의시설 업무 담당 공무원
2. 건축 및 편의시설에 대한 지식과 경력을 가진 자
3. 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 편의시설 보장이 필요한 자
4. 편의시설 관련 시민단체에서 활동 중에 있는 자
5. 장애인 단체에서 추천한 자

③위촉 검사요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
제8조(수당 등) 위촉 검사요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.

제9조(검사요원의 직무) ①검사요원은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편의시설 사전검사를 위한 현장 조사, 검사 및 확인을 하여야 한다.

②검사요원은 시설주관기관의 장이 정하는 편의시설에 대한 교육과정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.

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요원은 검사결과를 시설주관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.

제10조(검사요원의 의무 및 제척) ①검사요원은 그 임무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.

②검사요원은 사전검사결과를 조례가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.

③검사요원은 본인과 밀접한 이해관계가 있거나,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그 해당시설에 대하여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조사, 검사 및 확인에 참여할 수 없다.

제11조(관계공무원의 의무) ①관계공무원은 대상시설의 시설주에게 사전검사의 취지를 통보하고, 사전검사에 협력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.

②관계공무원은 편의시설 사전검사 시 이를 검사요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③법에 규정된 편의시설의 설치에 관한 교육과 홍보, 사전검사를 위한 연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
제12조(건축물 시설주의 의무) ①시설주는 사전검사가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현장 안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
②시설주는 시설주관기관의 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사전검사 결과 내용을 반영한 후 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 시설주관기관의 장에게 사용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.

제13조(사전검사 보고서의 작성과 보고) ①검사요원은 사전검사를 실시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사전검사에 참여한 검사요원의 서명을 받은 사전검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설주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검사를 실시한 후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
제14조(사전검사 결과의 반영) ①해당부서에서는 사전검사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은 즉시 시설주에게 통보하고 그 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.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검사 결과를 반영하거나 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시설주관기관의 장은 검사요원 일부 또는 전체 검사요원을 소집하여 의견을 구할 수 있고, 관계기관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

제15조(예산의 확보) 시설주관기관의 장은 편의시설 설치 및 그에 관한 연구와 교육, 홍보, 사전검사를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이를 시행 하여야 한다.

제16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이조례 시행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.

관 련 법 령

【장애인·노인·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】

- 제7조, 제15조, 제22조, 제23조

第7條 (對象施設) 便宜施設을 設置하여야 하는 대상(이하 "對象施設"이라 한다)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.

1. 삭제 <2005.1.27>
2. 公園
3. 公共建物 및 公衆利用施設
4. 共同住宅
5. 삭제 <2005.1.27>
6. 通信施設
7. 기타 障礙人등의 편의를 위하여 便宜施設의 設置가 필요한 建物·施設 및 그 附帶施設

第15條 (적용의 緩和) ①施設主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第8條第2

項의 細部基準에 적합한 便宜施設의 設置가 곤란하거나 不合理한 경우에는 세부 기준을 완화한 별도의 기준을 정하고 施設主管機關의 승인을 얻어 이에 따라 便宜施設을 設置할 수 있다.

1. 細部基準에 적합한 便宜施設의 設置가 構造的으로 곤란한 경우
2. 細部基準에 적합하게 便宜施設을 設置할 경우 安全管理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
3. 對象施設의 用途 및 周邊與件에 비추어 細部基準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4. 기타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경우

②施設主管機關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승인을 함에 있어 障礙人등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.

③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승인의 節次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.

第22條 (資料提出 요구 및 檢査) ①保健福祉部長官과 施設主管機關은 施設主에게 便宜施設의 設置 및 운영에 관련된 資料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所屬公務員으로 하여금 便宜施設設置 및 設置된 便宜施設의 細部基準에의 적합성 여부에 관하여 檢査하게 할 수 있다.

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檢査를 하는 者は 그 權限을 표시하는 證票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.

第23條 (是正命令등) ①施設主管機關은 對象施設이 이 法の 規定에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施設主에게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이 法에 적합하도록 便宜施設의 設置 및 개선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.

②保健福祉部長官은 施設主管機關에게 소관 對象施設에 대한 便宜施設의 設置

및 개선등 是正措置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施設主管機關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.

【장애인·노인·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시행령】 제7조

제7조 (적용의 완화) ①법 제15조제1항제4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"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 <개정 2007.2.12>

1.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부기준에 적합한 편의시설을 설치할 경우 「문화재보호법」 제2조제1항제1호,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문화재로서의 역사적인 가치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
2. 과학기술의 발전 등에 따라 세부기준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대안을 제시하는 경우

②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부기준을 완화한 별도의 기준을 승인받고자 하는 자는 승인신청서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시설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③시설주관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 적용의 완화여부 및 범위를 결정하고 지체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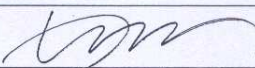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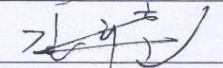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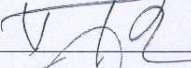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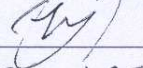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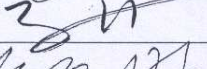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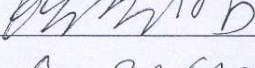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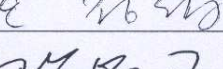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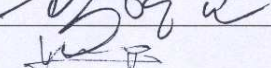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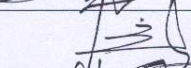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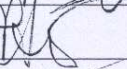
④시설주관기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의 완화여부 등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편의시설 또는 장애인·노인·여성복지에 관한 전문가 3인이상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. <개정 2007.2.12>

【건축법】 제8조

第8條 (建築許可) ①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 다만,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 <개정 2005.11.8>

대전광역시 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
사전검사에 관한 조례안

찬 성 의 원 서 명

의 원 명	서 명	비 고
김 인 국		
김 태 훈		
박 희 권		
이 성 희		
김 영 원		
오 영 세		
박 수 범		
오 정 영		
곽 영 고		
송 재 흥		
김 영 희		
김 상 무		
이 상 태		
권 형 제	